

‘계엄 사태’ 장기화...정치권 대책 마련 골몰

‘12·3 윤석열 내란 사태’가 신속히 종결되지 않으면서 기득권 저항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야권은 지난 10일 궐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양당 지지를 구도가 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 긴장감이 역력한 분위기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여야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민주당 39%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3주 전과 비교해 국민의

힘은 10%p 오른 반면, 민주당은 12%p 떨어진 결과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베풀면서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섰고 여론조사 과정에서도 보수층이 과표집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 파면·수사와 조기 대선이 ‘속전속결’로 진행됐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과는 달리 여권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으로 전방위적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차원의 ‘내란 국조특위’는 이번

갤럽 조사 결과 국힘 34% vs 민주 36% 차이 없어
野, ‘尹파면’ 전열 정비...여론 주시하며 언행 주의령
與, 대권주자 1위 ‘이재명 때리기’로 국면 전환 시도

주 본격 가능하다. 14일에는 국방부와 부터 매주 두 차례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도 탄핵 정국의 여론 흐름을 바꿀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당내에선 민감한 시기의 여론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언행 주의’ 등 내부 단속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거치며 바

짝 몸을 낮췄으나 새해 들어 윤 대통령 체포 시도는 물론, 탄핵소추의 법률·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때리기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 대표가 각종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이 대표가 만들 국가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짚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보수·중도층을 대상으로 반(反)이재명 여론을 자극해 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벌써 지지율 상승에 취한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지지율 상승은 그간 숨겨왔던 지지층의 결집, 또는 민주당의 강공 일변도에 따른 ‘반사 이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보수적으로 보면 그동안 당에 실망해 여론조사 응답을 하지 않았던 지지자들이 응답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중도층을 포섭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前경호처장·본부장, 경찰 조사 후 귀가...차장은 불응

박준준 “수사 최대한 성실 협조”
이진하 본부장 “성실히 임했다”
김성훈 차장 3차례 모두 불출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준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난 10일 오전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전 경호처장은 이날 미리 제출한 사직서가 조사 도중 수거되며 전직 신분이 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박준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이 지난 11일 경찰에 출석해 늦은 밤까지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처장의 사직으로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성훈 차장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9시에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한 박 전 처장은 밤 11시 25분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전날 13시간에 이어 이날도 약 14시간 30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처장은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것을 상세히 소명했다”고 답했다.

경호처장 사직은 왜 표명했는지, 체포 저지선 설치나 일방 병사 동원도 윤 대통령 지시인지 등을 묻는 말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떠났다.

경찰은 박 전 처장에게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할 당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체포 저지에 군 경호부대 사병을 동원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바 있

는지 등을 추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도 이날 오후 경찰에 출석해 9시간 가까이 피의자로 조사받고 귀가했다.

이 본부장은 밤 11시 15분께 국가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 ‘조사에 응한 이유가 무엇인가’,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에 없었다’, ‘사병 동원 지시

도 했다’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 본부장이 조사에 협조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의 내부 동요가 상당하다고 특별수사단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훈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국수본에 출석하라는 경찰의 세 번째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전날 박 전 처장의 사직으로 경호처장직 직무대행을 맡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그가 이를 주도적으로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尹탄핵은 진영논리 아닌 시대적 과업”

김영록 지사, 가수 나훈아 ‘좌우 양비론’ 발언 비판

김영록 전남지사가 가수 나훈아의 정치권에 대한 ‘양비론’ 비판 발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좌와 우가 싸우는 진영 논리가 아닌 시대적 과업”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양비론이 아닌 시대 정의를 바로 세우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나훈아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나훈아의 탄핵 사극 관련 발언은 아무리 팬이더라도 동의하기 어렵다. 아니 심히 우려스럽다”며 “평상시 같으면 좌우 싸우지 말고 통합 정신으로 정치를 잘해야 한다는 말씀이 지당하고 백번 옳지만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지사는 “우도 문제지만 ‘좌’보고 ‘나는 잘했나’라는 양비론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정의는 어디에 가서 찾아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김 지사는 또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 국가 수사기관들이 하루빨리 윤석열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 시시비비를 가리고 책임을 물어 정의를 바로 세울 일이지 양비론으로 몰타기 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길 일은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나훈아는 지난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돔에서 열린 고별 공연에서 자신의 왼팔을 가리키며 “나는 잘했나”라고 야망을 비판했다. 특히 그는 두 팔을 들어 보이며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고 말했다.

나훈아는 또 “우리 어머니는 형제가 어떤 이유가 있어도 싸우면 안 된다고 했다”며 “하는 꼬락서니가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하는 짓거리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재정기자

尹, 14일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

“신변안전·불상사 우려”...16일 본격 변론 시작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 측이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고, 지난 5일에도 “대통령은 적정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

라고 기자단에 알린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 측에서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 해결을 선결 과제로 제시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여부와 구체적 일정은 다소 불분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첫 정식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을 예고함에 따라 14일 변론은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중요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은 정식변론에는 당사자 출석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기일을 정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연합뉴스

헌재,尹대통령 탄핵심판 ‘본궤도’...주 2회 강행군 2월말-3월초 변론 종결...3월 중순-말 선고 전망

이번 주부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정식 변론에 나선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을 연다. 이날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재판이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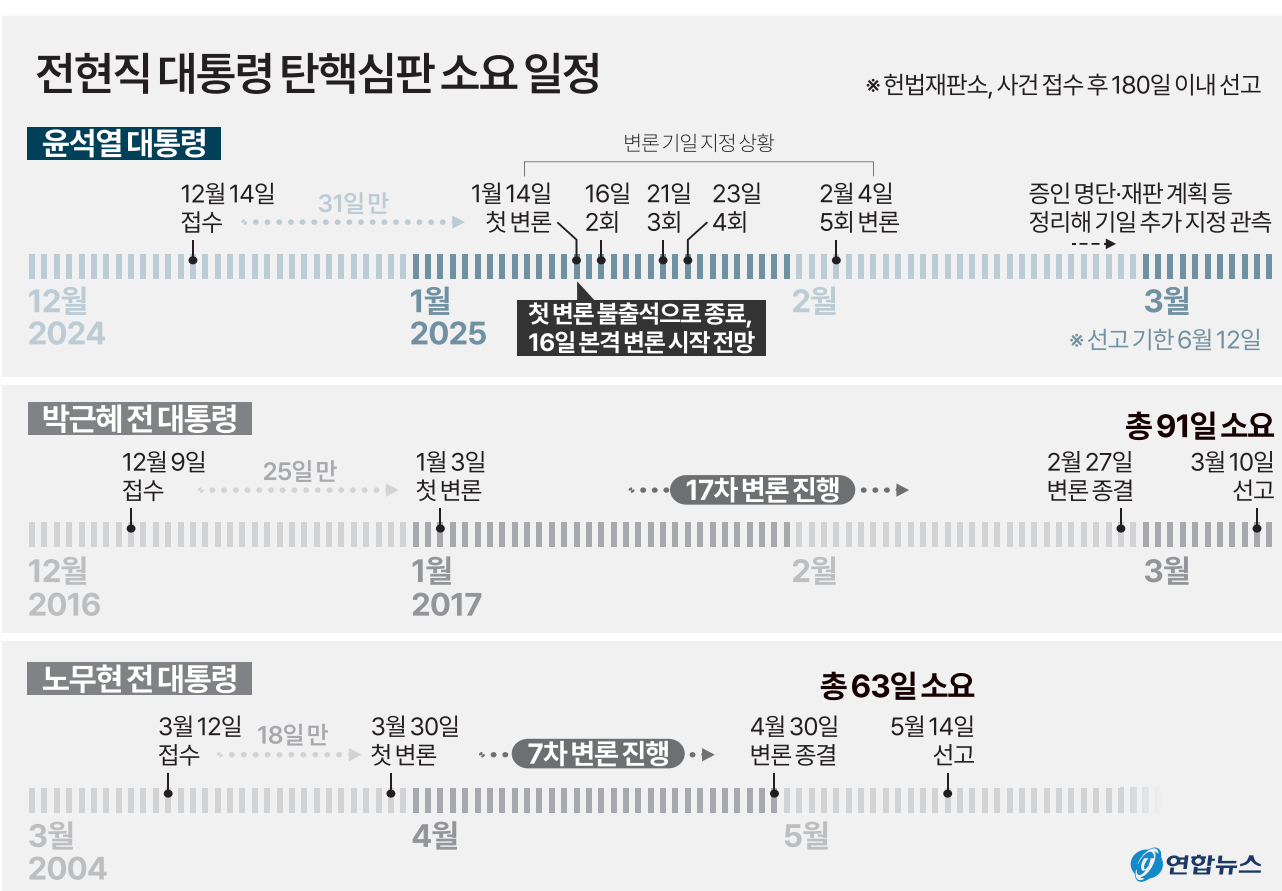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여는 셈이다. 심리 방향을 정하기 위한 재판관들의 평의도 매주 1회 열린다.

헌재는 증인 명단을 비롯한 재판 계획을 정리한 뒤 기일을 추가 지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탄핵심판을 두고 국론 분열이 극심한 데다 윤 대통령 측에서 공정한 재판을 강하게 요구하는 만큼 헌재가 변론 횟수를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2004년 3월 12일 접수돼 18일 만인 3월 30일 첫 변론이 열렸고 한달 뒤 4월 30일 7차 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5월 14일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2016년 12월 9일 접수돼 25일 만인 이듬해 1월 3일 첫 변론이 개최됐다. 2월 27일 17차 변론기일까지 약 두 달간 변론을 진행한 뒤 선고는 3월 10일 이뤄졌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14일 접수돼 첫 변론까지 31일이 소요되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유사하게 2월 말-3월 초쯤 변론을 종결하고 3월 중순-말께 심판을 선

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 탄핵심판 180일의 심판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여권에서도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 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최소 180일 동안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1면 '전남 의대 신설...'서 계속

무엇보다 지난해 3월 민생토론회와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남권 의대 신설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전남총리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소추돼 추진 동력을 상실한 상황이다.

최 대행의 2028년도 의대 증원 원점 협의 방침과 관련, 전남도와 양 대학은 2026학년도 전남권 의대 정원은 기존 의대 정원 증원이 아닌 신설 몫인 만큼 별개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은 지난해 3월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으로 약속했고 전남도 또한 의대 설립 대책 추진 절차,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에 맞는 대학 통합 합의 등 정부 요구 사항을 모두 이행한 만큼 정부에서도 행정의 연속성, 설립 단위성 차원에서 지속 추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국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전남권 의대 신설 명분과 필요성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3월 정원 배정 전까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회 등을 방문해 전남권 의대 신설을 꼭 이뤄내겠다”고 밝혔다.